

여야, 국회 정상화 힘겨루기 여전

“단독개원 불사” “이대론 못 들어가”

여 본회의 개최 요구서 제출... “4일 의장 선출” 으름장

18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단독개원’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야권은 최고기 민심을 지켜내 삼아 “이대론 못 들어가”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원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론에 해당하는 등원 전제 조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개원 논란=한나라당은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회기 종료일인 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때까지 야권의 등원이 없으면 친박연대 등과의 공조 하에 국회를 소집,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야당의 단독개원은 5공 군사시절에도 없었던 독재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가속전염병예방법 개정=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가속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 불가’에서 ‘국제 통상마찰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정’으로 입장을 완화했지만 야권의 요구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야 3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에 급주 내에 공동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및 국회특위 구성= 야당이 요구해 온 국정조사 실시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원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최고기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사법위와 기간, 대상 등 각론을 놓고는 이견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개원 후 설치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고기 특위와 민생대책 특위, 국회법 개정 특위 구성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로 방송장악 음모저지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의 간극이 크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행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할 형태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낮 청와대에서 이정록 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에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팽창 정책 수정되나

李 대통령, 균형발전위원 위촉장 수여... 연일 ‘균형 발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뒤 오전을 함께하며 “지금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이라며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발족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이번에는 실질적,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 민간위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위원들은 지역을 초월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의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는 김주현 지방행정연구원장, 이성용 광양시장,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 민간위원은 당원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

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함께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정책에 관한 조정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국가균형발전위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존치하기로 합의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그 지역에 특화된 계획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총장 국회예방 무산될 듯

국회 공전사태 속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회 예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3일 방한하는 반 총장은 당초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유엔 관련기구 행사 참석차 국회 본청에 들러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반 총장을 맞아줄 국회의장조차 뽑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는 터라 이 같은 계획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기 파동을 놓고 여야간에 출구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반 총장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 들르지 못한 채 의원회관으로 직행, 유엔 세계관광기구스텝제단(이사장 도영심) 주관으로 열리는 ‘기후변화와 새천년개발목표’ 연설회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에서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의장 내정자라는 어정정한 신분으로 의원회관에 나와 김태양 사무총장과 함께 반 총장을 맞는 어색한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민급 인사가 국회를 방문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영접하고 면담을 갖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걸맞은 국민급 예우와 경호로 반 총장을 맞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는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한달 넘도록 공전해 유엔 사무총장이 정식 예방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과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정, 폭력시위 민사책임 묻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반드시 묻기로 하는 등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 입태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간에 시위를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점거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거기에 참가한 분들에게도 명확한 법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종교인들이 참여한 촛불집회라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야간에 시위 형식으로 변경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한빛을 만나라! 합격하리라!' featuring a list of exam subjects (Seoul City, Jeonnam, 9th grade) and a table of course fees and dates. Includes contact info for Hanbit Gosi.

Advertisement for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7th grade civil servant complete preparation) with a list of subjects and exam dates. Includes contact info for MDGosi.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School) with details on course fees, exam dat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농산물품질관리사'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with details on exam dates, fees, and contact info for Jeonnam Gosihakwon.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Public Brokerage Specialist National Top) with details on course fees, exam dates, and contact info for Gwangju Gosihakwon.